

서삼석 새 도당 위원장 취임 ...8.4 도당 정기대의원대회

“생동감과 웃음있는 정당, 민생현장 찾아가는 정당 만들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8월 4일 담양문화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을 새 전남도당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관련 사진 10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겸해 열린 이날 대회에는 추미애 대표와 노웅래 당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대의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서삼석 신임 도당위원장은 수락연설을 통해 “생동감과 웃음 있는 정당, 상식 있는 정당, 민생현장에 찾아가는 정당으로 만들어 2년 뒤 총선과 그 뒤 대선, 다음 지방선거에 모두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취임포부를 밝혔다.

이어 △도민·당원들의 삶에 꼭 필

요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는 정당 △소금처럼 변함없이 당원들의 심부름을 하는 위원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서 위원장은 무안출신으로 전남대 NGO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제5, 6대 전남도의회원과 3선 무안군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중이다.

당 지도부-전남도 예산정책협의회

“한전공대, 무안공항 활성화 등 지역현안 적극 지원”약속
이해찬 대표, “지방이양일괄법 연내 국회 통과 노력”



당 지도부가 전남도와 가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뒤 전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남도로부터 정책지원 4건과 주요 현안사업 37건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청받았다.

협의회에는 이 대표와 박 최고위원 외에 박광은, 설훈, 김해영, 남인순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간사 등 당 지도부와 서삼석 도당위원장, 이용재 전남도의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산업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교육도 발전을 못

하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올해 회기 내에 국회에 통과돼서 중앙 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도당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없는 전남의 도당 위원장으로서 하중이 크다. 예산 걱정 안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부에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정책 건의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흑산공항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지원과 한전공대 유치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전 정부에서 공항이나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SOC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정해줄 바

란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유지에 대해서 “한전공대 추진위를 구성해 대학 설립을 위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해안철도 전철화, 흑산공항 건설 등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구축,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경전선(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국립민속박물관 순천 분관 건립,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등 현안사업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예결특위 조정식 간사와 정책위의장이 잘 협의해서 가능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며 “예산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발행인 칼럼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소득주도 성장의 올바른 이해

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이번 추석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평화정책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경제적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최근 발표된 가계소득 관련 통계결과에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소득격차 확대와 취업률 저하를 두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그러나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극히 일부 분야 불과하다.

“소득주도 성장”이란 가계의 임금 혹은 소득을 늘림으로써 전체 소비(내수)를 증진시켜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 추세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은 돈을 수백조원씩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투자는 줄고, 국내수요는 정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 소득수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2016년에 이미 OECD 국가(37개국)중 3번째로 높다.

우리나라는 IMF사태가 터진 1990년 말부터 소득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1996년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6.12%로 가장 높았다가 IMF위기 때부터 떨어져 2016년에는 52.24%였다.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경제성장률보다는 낮은 실질임금 증가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되고 우리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 정책 방향으로 경제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

하였다. 과거 대기업·수출중심의 성장정책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대 전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세 가지 정책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최저임금의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 인하·각종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장하여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용 등을 줄이고,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안이다.

셋째는 직업능력 개발과 공공 취업 서비스 확대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갖는 것이다.

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경제정책을 바꾸는 것은 충분한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시급한 분야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이다. 지난해 65세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농촌 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향후 2040년이면 약 34.6%가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로 가계 안정을 꾀하는 거시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할 국가적 과제이다.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공정한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인내하는 시간이 아직은 필요하다.

새 당 대표에 이해찬 의원...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의원 선출...지명직 최고위원 이형석, 이수진

새로운 당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세종시)이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서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42.88%의 득표율로 송영길·김진표(기호순) 후보를 제치고 1위에 오른 이해찬 후보를 대표로 선출했다.

송 후보는 30.73%, 김 후보는 26.3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대의원(40.57%), 권리당원(42.79%), 국민여론(44.03%), 일반당원(38.20%) 투표 모두 40%를 넘는 득표율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심이 강렬한 리더십을 내세운 이 대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국을 돌며 약속드린 대로 민생경제연석회의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진노(진노부현) 그룹의 좌장이며, 1988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돼 교육부장관, 총리, 당 대표를 역임한 우리 당 역사의 산 증인으로 꼽힌다.

최고위원으로는 박주민(조선·21.28%), 박광온(제천·16.67%), 설훈(4선·16.28%), 김해영(조선·12.28%) 의원이 뽑혔다. 남인순(제천·8.42%) 의원은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이해찬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이형석 전 광주시당위원장, 이수진 전 노동위원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를 소개합니다
이해찬 대표

광주학살의 원흉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이해찬 대표, 당 지도부 5·18민주묘역 참배



8.25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해찬 당 대표 및 김해영, 박주민, 설훈, 박광온, 남인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5·18민주묘지 참배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서삼석 전남도당 위원장, 송갑석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및 광주·전남 지역위원장과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배에 앞서 이해찬 대표는 방명록에 "5·18 광주정신은 영원합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5·18 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5·18이 일어난 이후) 38년 동안 많은 영혼들이 잠들어 있는데 아직도 발표명령에 관한 확실한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광주 학살의 원흉을 밝히고 발표 명령자를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두환씨가) 재판장에 출석해서 용서를 빌어도 안될 터인데, 재판장에 불출석까지 한다는 것을 보고 참 한참 떨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사무처 당직개편 실시

정무조정실장에 이경윤, 정책실장에 김호진

서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도당 정무조정실장에 이경윤 전 영암·무안·신안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정책실장에 김호진 전 정책실장을 임명하는 등 도당 사무처 당직개편을 실시했다.

이어 대변인 겸 홍보국장에 홍지영 전 대변인, 총무국장에 박경민 지역위원회 전 총무부장, 조직국장에 정대진 전 조직국장, 교육연수국장에 양기호 전 전남도당 기획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앞서 도당은 이날 이용재 임시의장(도의회 의장) 주재로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무처 상근 당직자 임명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서삼석 위원장은 "도민의 민생현장에 찾아가는 정당, 도민과 당원의 삶을 더 보고, 더 듣고, 더 살피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책임자를 인선하는데 당직개편의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도당 여성·청년·노인위원장 공모 후 경선기로

도당 장애인위원장 이재한, 노동위원장 최병용 도의원 임명 을지키는위원장 나항도, 사회적경제 박문옥·다문화 이현창...11일 도당 2차 상무위



전남도당 장애인위원장에 이재한 전 도당 장애인위원장(장흥), 노동위원장에 최병용 도의원(여수)이 각각 임명됐다.

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에 나항도 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사회적경제위원장에 박문옥 도의원(목포), 다문화위원장에 이현창 도의원(구례)이 각각 선출됐다.

전남도당은 지난 11일 무안군 남악읍 도당 대회의실에서 서삼석 도당위원장 주재로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 위원장이 임명 제청한 각급 위원장 임명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확정, 의결했다.

도당 상무위는 또 각급 위원회 중 여성·노인·청년위원장은 19일까지 공모를 거쳐 오는 10월 15일 제3차 상무위에서 경선을 거쳐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경선을 관리할 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에 이용재 도의회 의장을, 선관위에는 임용수·김문수 도의원과 이순이 해남군의회 의장, 박금례 진도군의원, 박재호 홍보소통위원장, 이경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상무위 회의에는 서 위원장 외에 신정훈(나주·화순),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윤제갑(해남·완도·진도) 지

역위원장과 김준성 영광군수, 김산 무안군수, 이용재 도의회 의장과 이민준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등 상무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광장 2018. 9. 18 (제21호)

발행인 | 서삼석 편집인 | 홍지영
발행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무안 라-0002호 기타간행물 월간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74 403호
TEL: 061-287-1219 FAX: 061-287-0415

서삼석 도당위원장

무안군 해제면 가뭄피해 점검...민생행보 가속화



지역 숙원사업 현장 답사, "국비 확보 노력" 약속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달 1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김철홍)과 함께 지역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 답사를 한 뒤 가뭄현장에도 들러 피해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답사는 그동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국비 확보 등 지역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계획되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안군 숙원사업인 압해~송공, 신장~북룡간 선형개량사업 현장을 찾았는데 이어 무안군 흥룡 교차로~해제 학천

교차로 구간 확포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협소한 도로폭 확장, 곡선구간의 선형개량을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이계호 농림부장관과 함께 무안군 해제면 양매리 옥수수밭 가뭄현장에서 김산 무안군수로부터 농작물 가뭄피해 상황(벼 56.8ha, 밭작물 74.6ha)을 청취하고 농민들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영산강 IV지구 농업개발사업 예산 확대 지원 및 조기완공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 숙원사업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 내년 국고 예산 6조 원대 확보...2012년 엑스포 이후 처음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등 전남 현안 SOC 추진 '청신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남 현안 사업비로 6조 원대가 반영돼 전남 사회간접자본, SOC 등 지역 현안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전라남도도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전남 현안의 국고 확보 현황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보다 10.9% 늘어난 6조1,041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2012년 여수엑스포 후 정부 예산안이 6조 원 대를 처음 돌파했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SOC 사업은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 건설 2천9백억 원과 광주~완도 1단계 고속도로 건설 696억 원, 광주 3순환 고속도로 건설 569억 원이다.

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465억,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425억 원도 포함됐으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설계비 260억 원만 반영됐으나 설계완료 후에는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 사업인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187억 원과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82억 원, 중소 중견 기업 지원을 위한 전기차 개방형 공용 플랫폼 개발 80억 원이 반영됐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추진 50억 원과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 38억 원, 산업용 고용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 구축 37억 원, 무인기, 드론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21억 원 등이 포함됐다.

농수산 분야는 영산강 4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410억,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 27억,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확대 19억, 제1회 섬의 날 개최 전남 유치 지원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보건과 복지·노동 분야는 기초 연금 8천723억, 아동 수당 664억, 노인 일자리 486억, 치매 치료 295억, 장애인 활동지원 275억 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정부가 내년부터 집중 투자하기로 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이 공모로 추진되는 만큼 스마트팜 혁신벨리와 스마트 축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 단지 조성 5억과 해양 경찰 서부 정비장 구축 50억,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 471억, 여수 경도 연륙

교 건설 50억 원 등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또, 해양 경찰 서부 정비장 구축과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10월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국회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여수 경도 연륙교 건설은 산자부 심의를 통과해 국비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남해안 철도 건설은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전철화 사업이 동시 추진되도록 진행하고 있으며 증액과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미래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드론, 스마트팜 등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집중 투자해 '인구 2백만 회복'을 앞당기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당 당원자격심사위, 배운규씨 등 100명 복당 허용

6일 복당 심사 회의 결과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지난 6일 도당 회의실에서 복당 신청자 138명에 대한 복당 심사 회의를 열고 배운규씨(여수) 등 100명에 대해 복당 허용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당 당지위는 또 윤모씨(해남) 등 4명에 대해서는 중대한 해당 행위 등의 사유로 불허처분을, 심모씨 등 32명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작해 보류처분을 각각 내렸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복당은 원칙적으로 탈당한 지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탈당 당시의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 및 복당사유 등을 명시한 별지 2호 서식의 복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도당은 지난 11일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당지위의 복당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했다.

민주당-전라남도 예산정책협의회

"낙후지역 SOC건설 별도기준 적용 및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을"

전라남도 주요 국비지원 요청 현안사업 내용

전라남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의 새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한전공대 설립 등 정책건의 4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구축 등 37건의 현안사업 국고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도지사는 "이전 정부에서 수립된 각종 국가계획을 재검토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정계획을 마련해 낙후지역의 SOC사업에 별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국가계획'에 전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국가계획 미반영을 이유로 '19년 국고예산 신청조차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당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첫 번째 시작하는 전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고위원들과 함께 왔다"며 "여러 현안사업에 대해 당 예결특위 간사, 정책위의장 등과 협의해 잘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사업이 중요하다"며 "한전을 중심으로 한 연관된 산업들, 에너지벨리나 전기자동차 등과 연관된 산업들이 파생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전남도에서도 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건의

- 전남 현안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 철도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 서해안 철도(군산~목포) 건설
 - 서울~제주 고속철도
 -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건설
 - 도로
 - 광주~고흥 고속도로
 - 해남 북일~강진 도암 국지도 시설개량
 - 곡성 겸면~삼기 국도 시설개량
 - 항만: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건설 등 6건
- 재정분권 추진 시 재정격차 완화방안 마련
 -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되 재정격차 완화장치 마련
 - 지방소득세 인상분에 대한 공동세 도입 및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 내국세 총액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
- 수도권 공공기관의 전남 추가 이전 지원
-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대(Kepco-Tech) 설립 지원

예산지원 건의

- 혁신공항 건설 : 섬 주민 교통기본권 확보 등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 사업비 100억 원 국비 반영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기반 구축
 - 공항 통합에 따른 서남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설계비 20억 국비 반영
 -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속 승인
-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및 전철화
 - 계획기간(漚年) 내 완공을 위해 사업비 변경 => 단선철도, 전철화 동시 추진
 - 사업비 3,500억 원 국비 반영
- 서남해안 관광도로(완도~고흥) 건설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반영
-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
-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 서울~제주 고속철도 추진
- EMU 준고속철도 철량정비기지 구축
- 에너지기업 중심 국가산단 지정(나주혁신산단 인근)
-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지원
-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
-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 에너지-ICT 융합 지식산업집적센터 구축
- 선박 평형수 처리시스템(BWMS) 기반 구축
- 남악 신재생에너지 홍보전시관 리모델링
-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조성사업(전남 서남부 지역 일원)
- 서남해안 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지원
- 국립민속박물관 순천 분관 건립
-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구축(목포 신항만)
-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Renewal) 사업
-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목포 대양산단)
- 해남 땅끝 친환경농업 테마파크 조성
-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해남·영암·강진군 일원)
-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무안·신안·함평·영광군 일원)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소 설립
-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개설
- 목포신항 제2자동차부두 건설
-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진도 팽목항 일원)
- 광양항 제3투기장 조기 조성
- 어업재해 복구 지원 현실화
- 국립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 남악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및 관광자원화
- 여수국가산단 공업용수 공급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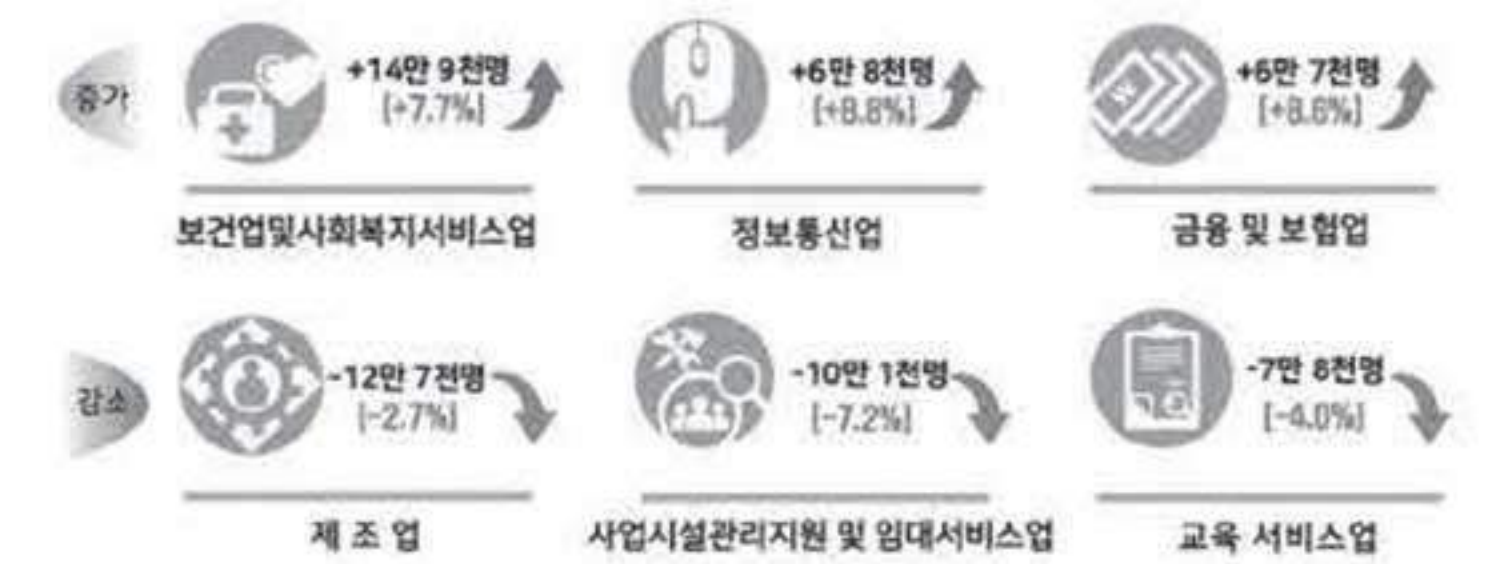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 구조



⊕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 산업별 취업자 현황



고용쇼크, 그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수언론·야당 ‘고용쇼크, 일자리 대란 공세’ 진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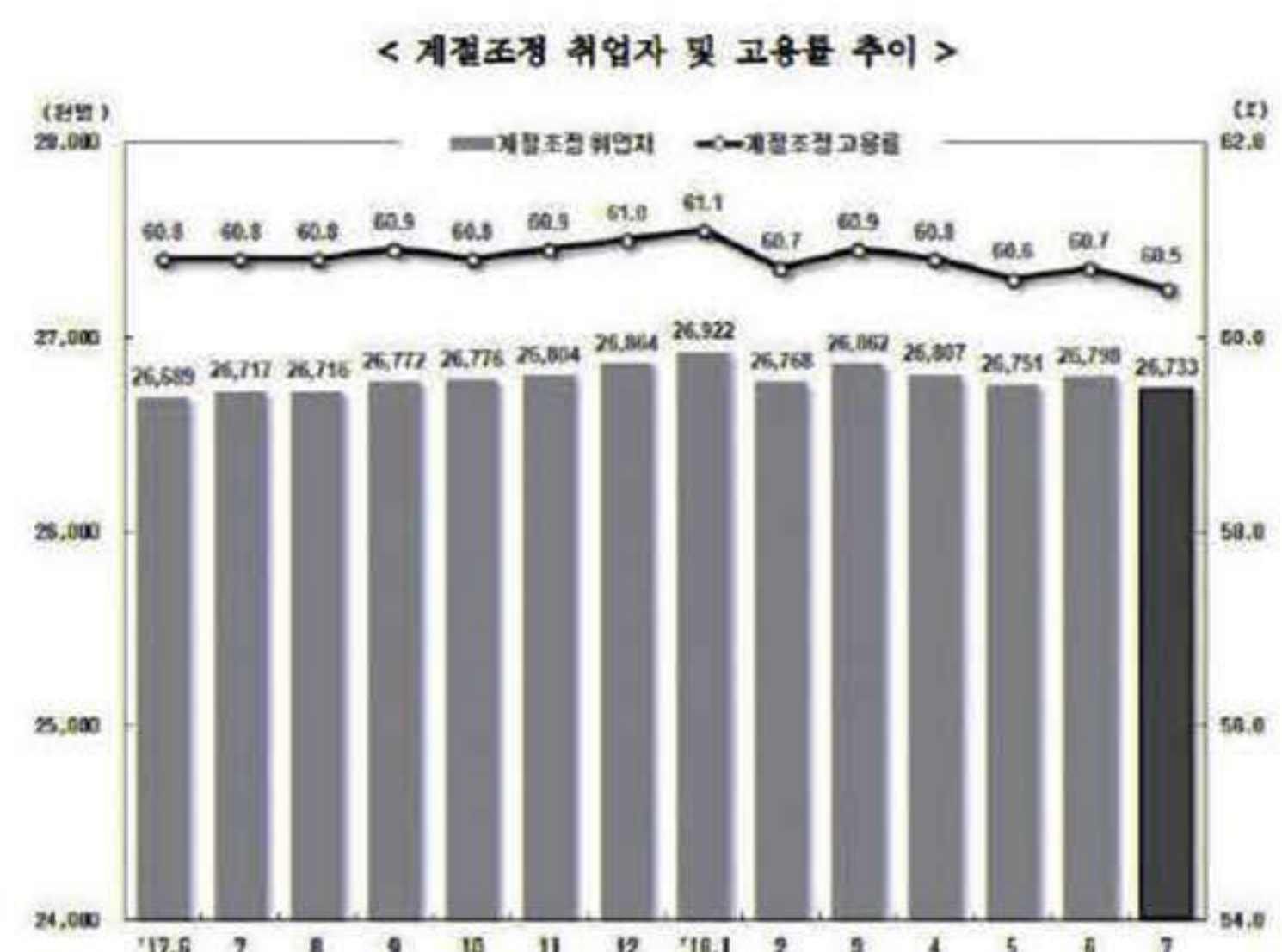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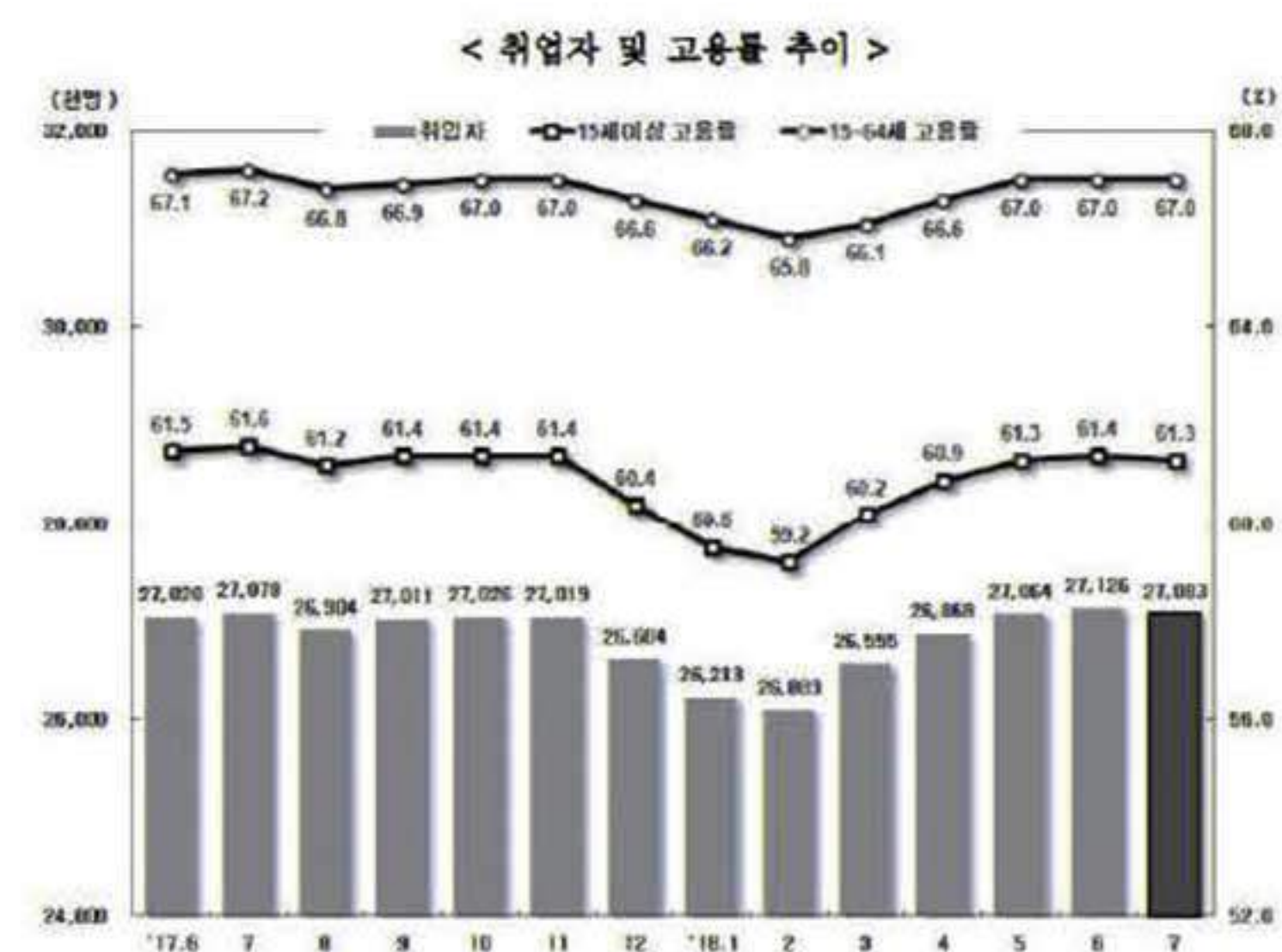
고용통계 악의적 왜곡, 인구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촛불로 물러난 세력들, 정치 전선에서 경제 전선으로 테세전환...
 최진기경제연구소 대표 최진기씨 팩트체크

보수 언론과 일부 경제신문들이 고용 통계를 악용해 고용쇼크와 일자리 참사를 연일 확대 재생산하면서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여기에 발맞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이 여론조작 성장이라며 폄하하고 고용쇼크의 원인이 된 것처럼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진기의 생존경제'라는 강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진기경제연구소 대표가 최근 '고용쇼크, 그 진실은?'이란 유튜브 강의를 통해 팩트체크를 한 강의내용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통계를 악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조목조목 반박한 그의 영상강의는 지난 12일 현재 무려 21만1,320명이 시청했다. 이 강의내용을 자세히 소개한 한 경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무려 5만6천여 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고용쇼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최씨의 강의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자료: 통계청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한국의 이혼율(2002년)이 47.4%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언론을 통해 크게 소개됐다. 당시 보도 내용대로라면 한국은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이혼대국이었다. 이는 서구 선진국인 노르웨이(44%), 영국(42%), 캐나다(38%), 프랑스(33%), 독일(30%) 보다 높다.

당시 보수 언론은 '경제위기가 가족해체를 가져왔다'는 한 대학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고 이혼정책을 둘러싼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을 대서특필했다. 나아가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 싫다 이 좌파정권...' 운운하며 마치 경제위기가 가족해체를 불러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문제의 이혼율 통계는 2002년의 이혼부부수(15만5,300쌍)를 단순히 결혼 부부수(30만6,600쌍)로 나눈 것으로 진짜 통계인 조이혼율(인구 1천명 당 이혼건수)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였다. 당시 조이혼율은 3%로 실제로 1천명 중 3쌍(6명)이 이혼할 뿐이었다.

최근의 고용통계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이번 정권 들어서 난리가 난 것처럼 더욱 악의적이다. 8년 반 만의 최악 고용쇼크, '일자리 참사' 등의 보도가 신문의 1면에 도배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다.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안찍었지만 고용쇼크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악의에 찬 보도태도는 참을 수 없다. "지난 7월의 취업자가 5천명 밖에 증가하지 않았고, 8년 반 만의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기사를 보자.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란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 통계로 근거로 쓴 기사에 따르면 실업자는 늘고 취업자 증가수는 줄어 최악의 고용쇼크가 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으로 취업자 증가수는 무조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수도 빼줘야 한다. 인구 증가 수도 마찬가지로 출생아수만 계산하

는 게 아니라 사망자수도 빼줘야 한다.

이런 구조적인 인구 구조를 생략한 채 이들 언론은 고용통계의 취업자 증가수 감소 현상을 문재인 정권 탓, 또는 경제가 나빠진 탓으로 돌리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퇴직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출생아수는 줄어드는 인구 구조를 도외시한 보도는 악의에 찬 말도 안되는 기사이다. 촛불에 의해 물러난 세력들이 처음엔 정치 전선하다가 안되니까 경제 전선으로 옮겨와 난리치고 있는 것 아닌가? 마치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친 것처럼...

중요한 건 취업률이다. IMF 때 최저 찍고 그 이후엔 평이한 증감률을 유지하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고용률이 변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취업자 수는 줄어든다. 고용률이 똑같이 70%일 때 생산가능인구가 100만 명이면 취업자 수가 70만 명이지만, 생산가능인구가 90만 명이라면 취업자 수는 63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인구구조의 문제를 경제위기의 문제로 몰아서 마치 무엇이 크게 잘못됐 것으로 몰아간다.

그 다음엔 경제정책 둘러싼 '청와대와 재정부의 갈등', 그 다음엔 '대통령의 사과', 이어서 '으!!!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좌파정권 탓이다. 통계를 악용해서 경제를 호도하는 행위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기득권과 언론의 카르텔이 막대로 주물러 노무현 정부 때 실제로는 경제지표도 좋고, 민주주의도 눈에 띄게 발전했으나 노무현이 경제를 죽였다고 악의적 기사로 도배를 하니 그게 사실이 됐다"며 "이런 농간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시민은 "대중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자극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라며 "충분히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런 행태는 영원할 겁니다"고 지적했다.

여수갑지역위,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10월 19일까지...국회에 특별법 제정 호소 편지도



여수갑지역위원회(위원장 직대 한정우)는 지난 8일 오후 이순신광장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앞서 여수갑지역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소속 시·도의원들과 당원들이 주축이 돼 여순사건 70주년을 맞는 10월 19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남도당과 인근 지역위원회에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협조 요청을 보내고, 중앙당 및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기로 하는 등 지역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한정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역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진상규명이 미비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 지역의 아픔이 치유되고 서로 화합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갑지역위는 6·13지방선거 때 '시민청원제', '기명투표 원칙 준수', '전남대 여수캠퍼스의 활성화 및 위상 제고'등을 공동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일 잘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재갑 위원장, 이낙연 총리와 진도 수목비엔날레 전시관 방문

윤재갑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2018국제수목비엔날레가 열리는 진도 윤립산방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문화예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담소를 나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전남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수목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국제수목비엔날레와남도문화예술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수목비엔날레는 수목을 주제로 하는 국내 최초 국제미술행사로서 지난 1일 개막해 다음달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6개 전시관에서 국내외 작가 271명의 작품 312점이 전시된다.



서삼석 도당 위원장, 7일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방안 토론회

서삼석 도당 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서 위원장이 주최하고 오진·신안군이 공동 주관한 토론회에는 산·학·연 관계자, 유관기관 및 해양전문가, 공무원, 선사,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인천발전연구원 한종학 연구원은 '연안여객선의 공적운영체계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연구

실장은 '내항 여객운송사업 대중교통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원광대 류권홍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인천대 김홍섭 교수, 목포해양대 이창희 교수, 해양수산부 김용태 연안해운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서 위원장은 "현재 도서지역 주민들은 육지와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이동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상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해상교통 정책 공적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일시 : 2018. 9. 7.(금) 14:00~16:0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서삼석 국회의원
주관 : 영암군, 신안군

1차 주제
연안여객선의 공적운영체계(준공영·공영제) 기능 강화 방안
(다산 연구원 황동진 연구위원)

2차 주제
내항 여객운송사업 대중교통화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연구위원)

3차 주제
전남대 원광홍 교수
김홍섭 목포해양대 교수
김용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김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과장
최현우 인천발전연구원 과장

서갑원 순천지역위원장, 신한대 총장 취임

서갑원 순천지역위원장이 지난 7월 20일 신한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했다. 신한대에 따르면 서 위원장은 최근 학교법인 신흥학원 이사회에서 제2대 총장에 선출됐으며 지난 7월 20일 신한대에벤에셀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는 강신경 신흥학원 설립자와 신한대 교직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관·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정자정야(政者正也), 교자정야(敎者正也)란 말처럼 정치와 교육은 세상을 바르게 하는 것이고, 정치와 교육이 다르지 않다. 교육 문제의 해결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국민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 정부 제1비서관과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국민대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목포지역위-목포시 첫 당정협의회...8.27 상그리아호텔

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는 지난달 27일 목포 상그리아비치 호텔에서 목포시와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김종식 목포시장 및 실무 국장단을 비롯해 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들이 참석해 9월 추경에서 목포시 지역현안 관련 대비확보를 위한 보고회와 국가사업에 대한 설명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실무 국장단은 내달 도 추경예산에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양산단 수산식품단지 해수관련 사업비 ▲김대중마라톤 대회 예산 등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



도록 도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 관련 연간 시 비용 28억에 대한 재정 부담을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도의원을 대표해 전경선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목포시 재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경 예산에 목포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위원장, 6·13지방선거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6·13지방선거 평가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기사 10면>

김장남 전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남 지역위원장과 4개 군 핵심 당직자와 당원,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최권일 광주일보 정치부 부장이, 패널 발제는 위수미 평통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장과 송영현 고흥군의원, 정광식 보성군의원, 백광철 장흥군의원, 윤기현 강진군의원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6·13지방선거 고흥과 장흥군수 패배 원인과 선거전략의 문제점, 지역민의 선택 기준 등을 분석해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정훈 위원장, 열병합발전소 반대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

신정훈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빛가람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범대위 소속 회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 위원장 외에 범대위 신상철, 이만섭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범대위 회원, 이민준·최명수 도의원, 허영우 나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강영록·이상만·지차남·임재수·박소준 시의원이 참석

했다.

이 자리에서 신 위원장은 "민주당은 범대위 그리고 시민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항상 열어 놓고 지속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축소·지연 없는 한전 공대 설립” 촉구

이민준 부의장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4일 본회의

전남도의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한전 공대를 대통령 공약대로 설립하는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 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 대표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국가적 현안사업 중 하나”라며 “혁신 도시 활성화, 국가균형 발전 의지를

뒷받침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 있는 지역인재 육성, 에너지 밸리 성공 등 광주·전남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전은 지역 대학의 반대, 입지 경쟁, 재정부족 등을 핑계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설립 시기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관련 기관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전 공대 설립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나주 출신 이민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등으로 송부됐다. 한편 한전은 10일 한전 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용역 과정에서 제기된 규모 축소, 2022년 개교 목표 지연 등의 부정적 전망을 일축하고 설립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흥 수문~고흥 녹동간 연륙연도교 국책사업 추진 촉구 “득량만권 관광 인프라 획기적 개선 시급”

백광철 장흥군의원, 6일 군정질문 통해 주장

남해안 다도해 해상 관광벨트에 속하는 득량만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흥 수문~득량도~고흥 녹동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장흥~고흥 연륙연도교가 완공되면 두 지역뿐 아니라 인접한 보성·강진 등 득량만권 4개 군의 관광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전남 남부권의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남해안 관광프로젝트는 부산에서 고흥까지 만 대상지역으로 발표되고 득량만권의 보성, 장흥, 강진은 제외됐다”며 “전남 다도해권의 핵심지역인 득량만권이 소외된데 대한 대책과 원인은 무엇이나”고 따졌다.

이어 “장흥~고흥 녹동간 연륙연도교가 건설되면 장흥에서 녹동까지 1시간 20분 약 90km 걸리는 거리

가 10분, 여수까지는 40분 정도로 단축돼 남해안 관광시대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광주~완주고속도로 영암 금정IC~장흥 간 4차선 확장 및 장흥읍~회진 간 국도 28호선 확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한편 장흥은 전남 중남부권의 거점도시이면서 전남 도내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광주와 연결되는 4차선 직통도로가 없어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청년구직수당 지급조례안 의결

김태균 위원장 대표발의

청년구직수당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김태균 위원장(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청년구직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태균 위원장은 “우리 지역 청년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침체의 폭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간의 취업 준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현실성 있는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한층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위 구성

4일 이광일 도의원 대표 발의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지난 4일 이광일 의원(여수1)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 해양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광양만은 과거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었으나, 여수·광양 등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선 이후 어민들

의 조업을 목격하기 힘들 정도로 어업이 크게 위축됐다.

또, 인근 산업단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전남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광양만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생태계 변화 실태와 주요 오염원을 심층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광양만권의 해양 보전과 수산자원 확대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년 3월까지 간담회나 현지 활동 등을 이어가고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장세일 도의원 정례회 5분 발언

“안전성 논란 한빛원전 특위 구성해야”

장세일 도의원(영광1)은 지난 4일 열린 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전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최근 정부의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로 선정된 ‘영광 e-모빌리티 사업’육성 지원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안전위원

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도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별도로 도 차원의 원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큰 미래 산업인 e-모빌리티 사업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을 포함한 e-모빌리티 엑스포 육성, 관련 기관 및 기업 지원을 제안했다.

나광국 도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 대표 발의

나광국 도의원(무안2·안전건설소방위)은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남도내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립비용을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하고 이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

다. 지난해 전남도 총 공사계약은 187건 3천 088억 원이며, 이중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5억원 이상 공사는 74%인 총139건 3천81억 원이다.

나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 청렴 전남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수 도의원, 섬의 날 조례 대표 발의

김문수 도의원(신안1)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섬의 날 기념조례’가 6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통과했다.

조례안은 정부가 매년 8월 8일을 국가기념일인 ‘섬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전남도 차원의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남도는 매년 ‘섬의 날’기념행사와 섬 관련 축제, 문화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이를 수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섬의 날’에 전남도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선 이용자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섬 발전 공로자와 단체, 기업 등도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전남은 전국 섬의 65%(2165개)를 보유하고 있다.

‘6·13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토론회

...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8.31),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 주최

“바닥민심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된 공천 가능”

바람선거 사라지고, 후보자질과 능력으로 준엄한 판단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 패배했던 원인은 바닥민심을 의면하고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자만심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위원장 김승남)가 지난달 31일 장흥군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6·13지방선거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광주일보 최권일 정치부 부장은 “바닥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부장은 이날 ‘지역민심 제대로 읽는 공천해야란 기초발제를 통해 “6·13지방선거에서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100% 민주당이 당선된 광주와 달리 무소속과 야당 등 36.4%의 비(非)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김승남 지역위원장은 “6·13선거 결과 지역민들의 선택기준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후보에 대한 신뢰도, 정책개발 능력, 공약의 실현가능 여부 등으로 선택기준이 다양화하고 있다.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6·13지방선거 결과 우리당의 뿌리이자 가장 큰 지지기반인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 아쉬운 결과가 있었다”며 “지난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평가하여 희망의 정당,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김창남 전 전남도의회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남 지역위원장과 4개 군 핵심 당직자와 당원,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 기초발제 및 패널 발제 내용.

기초발제(최권일 광주일보 부장)

6·13지방선거에서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는 광주와 달리 비 민주당계 돌풍이 만만치 않았다. 과거 일당 독점 시절에도 전남 22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에 평균적으로 6~7곳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었다.

이는 인구가 밀집해 ‘바람’의 영향을 받는 도시(광주) 선거와 달리 전남은 학연과 지연, 혈연을 비롯한 조직력이 우선시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

호남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로 인해 민주당에 후보들이 대거 몰리면서 당내 경선이 과열돼 정책보다는 상대를 헐뜯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주를 이루면서 민주당에 등을 돌린 유권자가 늘었다.

또 후보들이 얼마나 지역민과 교감했는지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됐으나 권리당원 접촉에 올인 하느라 바닥민심을 소홀히 했고, 결과적으로 장흥과 고흥 등 일부 지역에서 패배의 원인이 됐다.

장흥군수 선거의 경우 패인은 ‘원팀’을 만들지 못한 조직력과 리더십 부재 △경선 탈락 후보의 무소속 출마 등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했고 △경선 이후의 선거전략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고흥군수 선거는 경선 후보들이 지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수후보로 공천을 확정된 것이 결정적 패인이 됐다. 선거전략 부재도 드러났다. 상대 후보가 내세운 전임 군수에 대한 과거 청산론 프레임을 극복하지 못했고, 집권당 후보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공약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전남은 민주당 깃발로만 승리할 수 없는 지역이다. 자치단체장 선거도 지역 특성에 따라 바닥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다.

패널발제

기초발제에 이어 △자민심과 적폐청산 프레임(송영현 고흥군의원) △달라진 유권자 의식에 맞는 공천 이뤄져야(백광철 장흥군의원) △주민과 함께 하는 지방선거 문화조성(위수미 민주당위원장) 등의 패널 토론회가 이어졌다.

송영현 고흥군 의원은 지역위원회의 과제로 자민심과 적폐청산 프레임을 제시했다. 또 후보자 선출방식의 문제점으로 권리당원의 경우 최소한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지는데, 당비를 납부하지도 민주당 당원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65세 이상 인구가 40%가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보니 혈연, 지연, 학연이 선택기준이 되어서 당락을 결정짓는 선거문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광철 장흥군 의원은 과거 황색비랍의 평화민주당 시절과는 민심의 보는 눈과 유권자 의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풀이식 묻지마 지지’의 시대는 가고 후보자의 능력과 공약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 그는 지방선거 개선과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과정, 정체성과 당성, 소신과 철학이 분명한 사람들로 지역 당직자를 구성하고 교류와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위수미 민주당평통자문회의 회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 유권자 의식수준은 현 정부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당 공천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투표가 아닌 진정 지역을 걱정하고, 지역발전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 개개인의 한 표가 현재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과연 정당공천이 필요한지 냉철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광식 보성군 의원은 무조건적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바람선거는 사라지고, 후보자의 자질과 인성, 능력을 따져 준엄한 판단을 내리는 시민의 본심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또 철저하게 유권자의 생활과 직결된 공익적이고 현실적인 공약,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로는 △튼튼하고 확실한 조직 구축 △유권자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 공약 개발 △상향식 공천 즉,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 도입 △당원 관리 및 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남약시론

서남해안 관광산업, 정부 주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때다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 국민의 해외소비 동향을 살펴보면 내수의 큰 축인 가계부문의 국내소비 증가는 정체된 가운데 해외로 유출된 해외소비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1년~17년 가계의 해외소비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소비가 연평균 1.6% 증가하는 동안

해외소비는 연평균 10.1% 늘어났으며, 11년 한해를 제외하고 해외소비 증가율이 국내소비 증가율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해외 여행객은 2,649만 명인 반면 외국인 국내 여행객은 1,333만 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인이 유학비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쓰고 온 돈만 27조 원인 반면, 우리의 여행수입은 13조 원으로 순수 여행수지만 들 여다봐도 14조 원 가량 적자다.

무역수지 적자에 비해 여행수지 적자는 서비스업과 관련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해외소비 증가는 상당부분 소득 수준 향상과 환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여행 산업과 해외여행 산업 간의 경쟁력 차이에 따른 국내의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이며, 이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내수부진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우리가 관광산업과 관련 내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선택을 받도록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웃 일본은 정부의 과감한 관광지원책과 규제개혁으로 여행수지를 7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놨다. 볼거리를 만들고, 바가지 요금을 없애고, 숙박시설을 깨끗하게 단장하고, 지역특화상품을 개발하고 해서 외국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던 결과이다.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먹거리와 관광상품, 바가지요금, 불결한 숙박시설로는 해외관광객은 물론이고 국내관광객을 다시 불러올 수 없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 열악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 관광산업을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해외소비 10%만 국내소비로 전환시킬 경우 부가가치는 2조5천억 규모이며 고용효과는 7만3천 여 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고용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러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국인의 소비성향을 바꿔나가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관광산업 분야에서 한국형 뉴딜정책이 나와야 할 때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지역 관광학계에서 관광지원이 풍부한 서남해안 섬들을 세계적수준의 관광단지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지만 IMF극복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국내 및 외국인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여행수지 적자를 바꿔나가 국내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의정
논단

전남 인구·일자리 문제 해법 없나...

전남의 노령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전남 인구는 200만이 붕괴되어 190만대를 유지해왔으나 이마저도 붕괴됐다.

구체적으로 작년 10월 말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1,894,676명에 848,387 세대(세대당 2.2명)이다.

2017년 9월, 741명이 줄고 8월에는 1,707명, 7월에는 384명이 줄어드는 등 뚜렷하게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김영록 지사가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해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여러 가지 대응체제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이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타 시·도에 비해 각고에 노력을 하는 모습에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듯하다.

필자가 생각하는 인구감소 원인은 크게 나눠 저출산과 이농현상 때문이다. 좀 더 멀리 내다보며 큰 그림을 그려갔으며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인구 늘리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제적인 문제이므로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농어촌 인구감소 현상은 전남의 일만은 아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그 심각성을 모두가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이농에 따른 인구 유출이다. 이농은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차지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의 일자리는 지키면서, 일자리의 질을 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전문가가 전남도청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일자리 전문가가 지역특성을 분석하여 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업 동향이나 인구 분포 상황에 따른 미래 예측 등을 통해 지역의 맞춤형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물론 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우리 지역의 경우 특산물을 우선 주목할 만하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 가공, 매매, 물류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세 번째 일자리를 지키고 질을 올려야 한다. 여기에는 이를 통합 관리할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곳은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이와 연계해서 취업 알선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근로 작업장 확대나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들의 활용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육아와 가정을 위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야말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자치단체가 공드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남의 일자리 정책이 인구 늘리기와 연계되는 사업이 되길 기대한다. 기업유치와 같은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출산율을 높이는 인구정책으로 도민이 인구감소 문제로 걱정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투 트랙+α' 협치 틀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들 간의 간담회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문 대통령과 민선 7기 광역단체장들의 첫 간담회는 대통령의 감기몸살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된 뒤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인해 또 다시 미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고용문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역 일자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청와대 측은 처음부터 이날 간담회를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그러나 지역의 입장에서 '일자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현안도 동시에 중요하다. 예컨대 광주·전남의 경우 한전공대나 흑산공항 신설 문제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 이후 6개월여 만이었다. 무려 1년 만의 만남인데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동시에 참석한 간담회였는데 광주·전남의 핵심 현안들이 함께 논의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가의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당 대표들과는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를, 여야 원내대표들과는 민생·개혁입법 등 내치(內治)를 논의하는 '투 트랙' 협치 틀을 구상 중이라 한다. 문 대통령이 '투 트랙' 협치 틀을 구상하는 것은 내치를 분리해서 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 관측이다.

하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청와대의 '투 트랙' 협치 구상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생각이다. 우선, '투 트랙' 중 외치의 영역에 포



김진수

광주매일 서울본부장

함되는 외교·안보 문제는 물론이고 내치의 영역에 속하는 민생·개혁입법과 관련한 논의 구조에서도 지역은 대체로 소외돼 있다. 만일 청와대의 '투 트랙' 구상대로 정국이 잘 돌아간다고 해도 지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한꺼번에 잘 풀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이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투 트랙+α' 협치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α는 당연히 지역이다. 심정적으로는 외치, 내치로 구분되는 '투 트랙'이 아니라 지역 정치 기층 '지치'(地治)를 보태 '쓰리 트랙'체제로 국정 운영의 기본을 삼으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균형발전이나 자치분권과 같은 지역 문제 역시 내치의 일부라는 점에서 +α 형태로 명명해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투 트랙' 중 외치는 여야 당 대표, 내치는 여야 원내대표가 파트너라고 한다면 '+α'의 파트너는 전국의 시·도지사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α'회의는 시·도지사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이 경청하는 장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논의사항을 청와대가 먼저 특정 주제로 제한하지 말았으면 한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 대한 전국 각 지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현안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설명

1. 광주MBC 주관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사하는 송영길, 이해찬, 김진표 후보(왼쪽부터).
2. 도당위원장 수락연설 하는 서삼석 도당위원장(8.4 도당 정기대의원대회).
3. 대의원들의 열기로 가득 찬 도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 대표·최고위원합동연설회장(담양문화회관).
4. 하의도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는 서삼석 도당위원장.
5. 당 지도부와 함께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뒤 언론과 인터뷰 중인 이해찬 대표.
6. 전남 합동연설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최고위원 후보자들.
7. 8·13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사말하는 이계호 전 도당위원장(농림수산부장관).
8. 지난달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9주기를 맞아 하의도 생가를 방문한 서삼석 도당위원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김산 무안군수, 김용배 신안군의회 의장.



전남도당 8월 재정운영 보고

수입, 당비 보조금 및 보조금 외 지원금 등 24억5,760만4,298원
지출, 기본경비 및 정치활동비 등 9,338만5,992원

전남도당(위원장 서삼석)의 지난 8월 말 현재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7억9,723만8,039원과 상급당부 보조금 외 지원금 1억3,988만6,654원, 보조금 1,575만0,505원 등 모두 24억5,760만4,298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305만4,120원, 기본경비 중 인건비로 3,787만5,902원, 사무소 설치 운영비로 1,245만2,810원을 포함, 총 9,338만5,992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현재 지출 잔액은 23억6,421만8,306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나라살림은 사회구성원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쓸 곳에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랫동안 작동을 멈춘 펌프와도 같은
우리 경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용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위하여 제반 정책들을 통해 고용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화순 청년위원장 이·취임식 및 정기회의



나주·화순지역위원회(위원장 신정훈)는 지난 9일 오후 나주 시도의회 합동사무소에서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이·취임식과 함께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40여 명의 청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신정훈 지역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

의 청년들이 당과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소준 신임 청년위원장은 청년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제도권에 진출한 모범사례이며 이러한 발판을 마련해준 안태순 전 청년위원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성원간의 상견례와 청년위원회 구성, 회칙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태순 전 청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향후 나주·화순청년위는 정기적 회의를 통해 청년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2018.8.1-8.31)

구분	과목	계	보조금외	경상보조금		
수입	전년도이월	1,797,238,039	1,771,493,422	25,744,617		
	당비	8,151,000	8,151,000	0		
	기탁금(중앙당에현함)	0	0	0		
	후원회기부금	0	0	0		
	보조금(중앙당에현함)	0	0	0		
	차입금	0	0	0		
	기관지발행사업수입	0	0	0		
	지원금	보조금	상급당부	15,750,505	0	
			하급당부	0	0	
			계	15,750,505	0	
	보조금외	상급당부	상급당부	139,986,654	139,986,654	
하급당부			0	0		
계			139,986,654	139,986,654		
소계	155,737,159	139,986,654	15,750,505			
그밖의수입	498,478,100	498,478,100	0			
합계	2,457,604,298	2,416,109,178	41,495,122			
지출	선거비용	0	0	0		
	기본경비	인건비	인건비	37,875,902	37,875,902	
			사무소 설치 운영비	12,452,810	12,452,810	
			정책개발비	2,464,000	2,464,000	
			조직활동비	40,590,120	40,590,120	
			여성정치발전비	0	0	
			그밖의경비	3,160	3,160	
	정치자금	보조금	상급당부	상급당부	0	
				하급당부	0	
			보조금외	상급당부	상급당부	0
					하급당부	0
소계	0	0				
합계	93,385,992	93,385,992	0			
잔액	2,364,218,306	2,322,723,184	41,495,122			

재정 운영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당은 권리당원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소중한 당비를 더욱 투명하고, 알차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김현진 차장 ☎ 061)287-1219

후식 명절과 관련한 선거법안내(공직선거법)

○ 할 수 있는 사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인튼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판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민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자료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2018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오늘의 수묵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2018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9.1. - 10.31.

목포시(문화예술회관) 일원
진도군(운림산방) 일원